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

정부, 여성취업 확대위해 기업 추가 비용부담 감소책

노동·여성계 “모권 보호장치 약화” 반발로 논란 예상

9일 최종안 확정

정부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장돼 있는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와 60일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해 여성 채용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 채용비율이 높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우대하고, 세무대학과 철도전문대 등 특수직 공무원 양성기관의 여성 입학생 정원을 별도로 두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12면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경우 공보·통계직 등 여성에 적합하면서도 여성 채용비율이 일정비율(20~30%) 이하인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2~3% 가산점을 주고, 각종 정부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석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교육·통상산업·보건복지·노동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력난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취업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세 추위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취업의 확대가 필요한데도 현행 노동관계법상 여성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지나쳐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성취업 확대방안과 함께 과도한 여성인력보호장치의 개정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세추위안과 다소 차이가 있고 여성계와 노동계로부터 여성인력 및 모권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와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현행 유급휴가제를 그대로 두되 기업의 관련비용을 손비로 처리해주는 세제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곽정수 기자